



국가상징구역 교통 대책 '26년 7월까지 마련

- 대중교통, 도로 인프라, 주차 등 교통 전 분야 개선으로 교통 수요 대응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강주엽)은 국회세종지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서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상징구역 교통 대책을 '26년 7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2023년 수행한 '행복도시 교통체계 개선' 연구에 따르면, 국회세종지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주요 국가시설이 추가로 입지 할 경우 국가상징구역 일대 발생 교통량은 하루 22,518대(12,670대→ 35,188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임난수로, 절재로, 햇무리교 등 국가상징구역 인근 주요도로의 정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행복청은 이러한 교통 여건 변화를 고려해 선제적인 종합 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교통 대책의 기본 방향은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강화 ▲정체가 예상되는 구간 집중 개선 ▲광역교통과 내부교통 기능의 효율적 분리·연계 ▲자가용 이용 수요관리와 주차 편의를 조화한 균형 있는 주차 정책으로 설정했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오송과 국회세종지사당을 연결하는 BRT 노선을 국회세종지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신설해 외부 유입 교통량을 대중교통으로 분담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시범운영 중인 폐쇄형 BRT 정류장을 확대하는 등 BRT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내부교통은 정체가 예상되는 도로 구간의 개선을 추진한다. 북측으로는 임난수로와 절재로 확장 및 주요 교차로 입체화를 통해 수도권에서 국가상징구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남측은 교통량 분산을 위해 금강

횡단교량을 신설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토대로 금남교와 갈매로 개선도 병행한다. 또한 기존 국지도 96호선의 통과기능 일부를 존치하여 동서방향의 교통체계도 일부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광역교통 측면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제4차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통해 국가상징구역 접근성을 높이고 내부도로 혼잡 완화를 꾀한다. 본 대책의 핵심 내용은 첫마을IC 설치와 함께 광역도로망 구조를 기존 ‘방사형’에서 ‘순환+격자형’으로 재편하는 방안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중으로 확정된 뒤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차 분야에서는 국가상징구역 근무자, 방문객 수요를 고려해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되, 주차장은 국가상징구역, 중앙공원 등의 외곽에 분산 배치하고 내부 순환 셔틀을 운영하여 내부 차량 진입수요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가상징구역 신교통 운영방안 수립 용역('25.10~'26.9)을 착수해 수행중에 있다.

한편,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제3차 제안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 민자사업 추진 절차를 거쳐 노선과 역사 위치가 확정될 예정이다. 행복청은 역사 위치가 확정되는 대로 BRT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환승 체계 마련을 위해 철도 당국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행복청은 세종시와 교통 학회, 연구기관 등과 TF를 구성하여 이러한 교통 대책 전반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26년 7월까지 심도 있는 국가상징구역 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국가상징구역 완성 시기에 맞춰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도시계획국 교통계획과	책임자	과 장	홍순민 (044-200-3280)
		담당자	사무관	문병협 (044-200-3284)

